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1. 3.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1. 조사 개요	1
2. 응답자 특성	2
3. 기후위기 체감도	4
4.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평가	10
5.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	15
6.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원칙·정책	21
7. 기후위기 대응 주체	35
8. 요약 및 시사점	37
〈붙임자료〉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40

요약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노동’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 ~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서베이몽키(surevymonkey)를 이용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029명이었으며, 이 중 845명이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추상적·직관적 체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직장 및 일상 삶의 문제로 연관 지어 인식하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자녀들)에 더 큰 영향’, ‘(일자리에) 직접 피해 없지만 피해 우려’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제1·순위 산업으로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선택한 노동자 비중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체감은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후위기를 ‘현재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노동자 비중도 대략 절반 내외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면에서는 ‘(현재) 직접 피해 없지만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후위기를 ‘현재 위협’보다는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받았고, 10명 중 4명은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

답했다. 이는 대략 절반 내외의 노동자가 ‘현재 위험’으로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위기가 이미 노동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은 노동자 비중이 65%로 인간의 무책임, 자연현상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고, ‘체제 전환’을 해결책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체계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선택이라기보다 ‘규범적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향후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및 고용전환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에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배적인 교섭체제인 기업별 교섭체제의 초기업 교섭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기후정책에 대해 ‘정부 대응 의지 및 체제가 부실하고 빈약’하며, ‘노동자 배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거의 10명 중 3명(28.2%)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적 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된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조사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 노동자로서 ‘일치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주체별 중요

성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양면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집단적 대응의 전제로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노동조합 중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조합 밖 주체’들의 역할을 ‘노동조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양가적 입장은 결국 노동조합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일곱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역별 정책 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이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규제 및 경제민주화 정책,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규제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른 영역별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대응과 기업규제 대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차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존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보장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하여,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적이다. 작업장은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면서, 노동조합 영향력이 일정하게나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전략 마련 과정에서 작업장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수준의 실천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초기업교섭을 성사시켜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다루도록 노력하되, 기업별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통의 요구를 포함하는 식으로 작업장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조사 개요¹⁾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민주노총 조합원 대상 ‘기후위기와 노동’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 명칭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조사 시기	2021년 9월 1일 ~ 9월 29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서베이몽키 이용)

조사 목적은 조합원이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 방향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표 2〉 소속 조직별 응답자 현황

소속 조직	참여자 수(명)	비율(%)
건설산업연맹	24	2.8%
공공운수노조	127	15.0%
공무원노조	20	2.4%
교수노조	9	1.1%
금속노조	133	15.7%
대학노조	103	12.2%
민주일반연맹	40	4.7%
보건의료노조	87	10.3%
비정규교수노조	22	2.6%
사무금융연맹	35	4.1%
서비스연맹	53	6.3%
언론노조	22	2.6%
민주여성노조	4	0.5%
전교조	44	5.2%
정보경제연맹	13	1.5%
화학섬유연맹	59	7.0%
지역본부 직가입	31	3.7%
모름	19	2.3%
합계	845	100.0

1) 이 글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1년 수행한 『기후위기와 노동』(이창근·김선철·류미경·류승민·탁선호) 연구 보고서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 ~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서베이몽키(surevymonkey)를 이용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029명이었으며, 이 중 845명이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845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응답자 특성

응답자(845명) 특성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표3〉 참조). 민간부문 300인 이상, 민간부문 300인 미만, 공공부문 비율은 각각 31~35% 사이로 집계됐는데, 대체로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된다. 성별로는 여성 33%, 남성 66%이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73%, 비정규직 2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5%, 30대 22.8%, 40대 42.0%, 50대 28.4%, 60대 2.2%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4.7세였다.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약 370만 원²⁾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비중이 높은 상위 3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22.1%), 제조업(18.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3%), 상위 3대 직업은 사무 종사자(26.8%), 전문가(21.4%), 서비스 종사자(16.7%)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업장 규모	공공부문	255	30.2
	민간부문 300인 이상	295	34.9
	민간부문 300인 미만	264	31.2
	기타	31	3.7
성별	여성	279	33.0
	남성	561	66.4
	그 외의 성	5	0.6
연령	20대	38	4.5
	30대	193	22.8
	40대	355	42.0
	50대	240	28.4
	60대	19	2.2

2) 월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이며,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액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만원 또는 십만원 단위로 임금을 기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대략의 추정치라는 점을 밝힌다.

		평균 연령	44.7세	
고용형태	정규직		616	7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06	12.5
		기간제	35	4.1
		시간제	16	1.9
		파견/용역/하청	46	5.4
		특수고용	20	2.4
		일용직	6	0.7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	0.2	
	광업	1	0.1	
	제조업	157	1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6	5.4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9	1.1	
	건설업	16	1.9	
	도소매업	16	1.9	
	운수·창고업	22	2.6	
	숙박·음식점업	9	1.1	
	정보통신업	54	6.4	
	금융·보험업	32	3.8	
	부동산업	1	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9	4.6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24	2.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3	3.9	
	교육 서비스업	187	22.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15.3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8	1.0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55	6.5	
	가구 내 고용활동	4	0.5	
	국제·외국기관	1	0.1	
	직업	관리자	50	5.9
		전문가	181	21.4
사무 종사자		226	26.8	
서비스 종사자		141	16.7	
판매 종사자		24	2.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7	7.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5	8.9	
단순노무 종사자		81	9.6	
직장	원청	446	52.8	
	하청(자회사, 민간위탁 등)	157	18.6	
	독립법인	242	28.6	
임금	평균 월 임금총액	370만 원		
합계		8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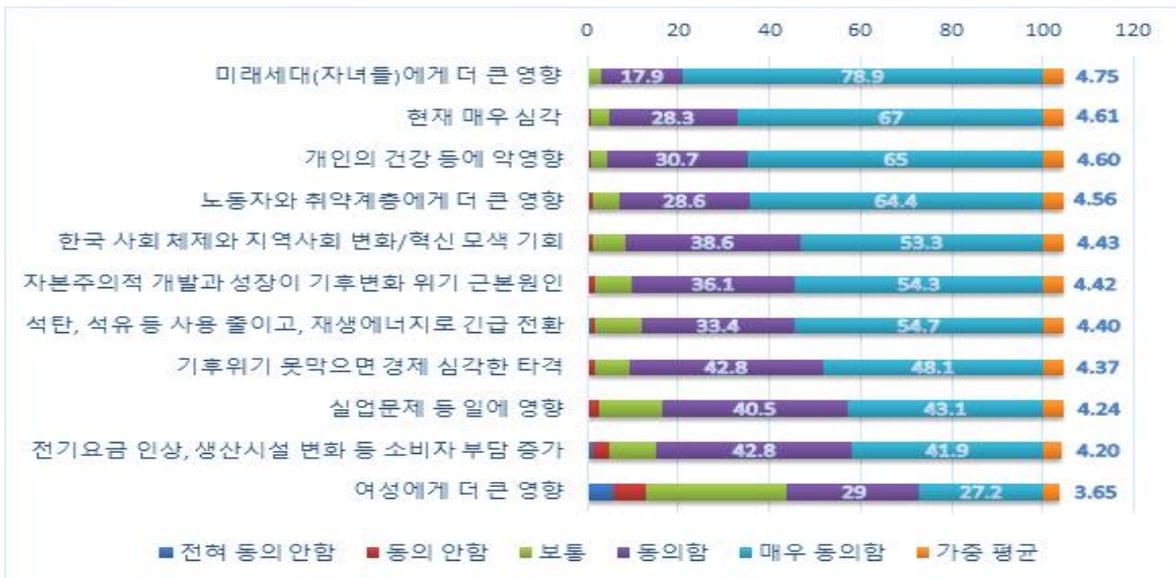
3. 기후위기 체감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추상적 체감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위기를 직장 및 일상 삶의 문제와 연관 지어 인식하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 추상적 체감도 대 구체적 체감도

기후변화위기 인식에 대한 질문(질문12)에서 응답자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기후변화 위기는 미래 세대(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4.75)³⁾이었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는 현재 매우 심각’(4.61), ‘기후변화 위기는 개인의 건강 등에 악영향’(4.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인식



1) 가중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라 계산한 가중 평균값임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은 하위 3대 항목은 ‘기후변화 위기는 실업 문제 등 일에 영향’(4.24), ‘기후변화 위기는 전기요금 인상, 생산시설 변화 등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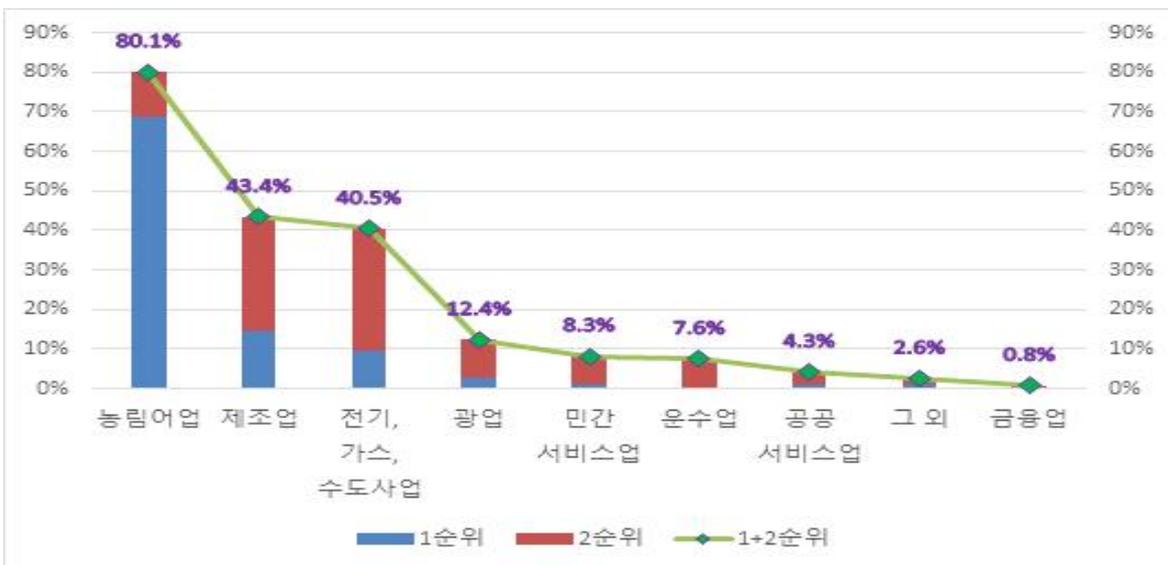
3) 괄호 안 점수는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라 계산한 가중 평균값이다.

‘기후변화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3.65) 등이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 인식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미래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기후위기를 ‘현재 위험’보다는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노동자가 더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후위기를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부담’ 등 직장 및 일상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인식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진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구체적 체감도 ① : 기후위기로 영향받는 산업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기후변화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인식이다. 기후변화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1순위 산업으로 거의 10명 중 7명이 농림어업(68.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4.8%), 전기가스·수도업(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순위로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는 전기가스·수도사업(30.8%), 제조업(28.6%), 농림어업(11.2%) 순으로 나타났다. 제1·2순위 응답을 합한 비중은 농림어업(80.1%)→제조업(43.4%)→전기가스·수도사업(40.5%)→광업(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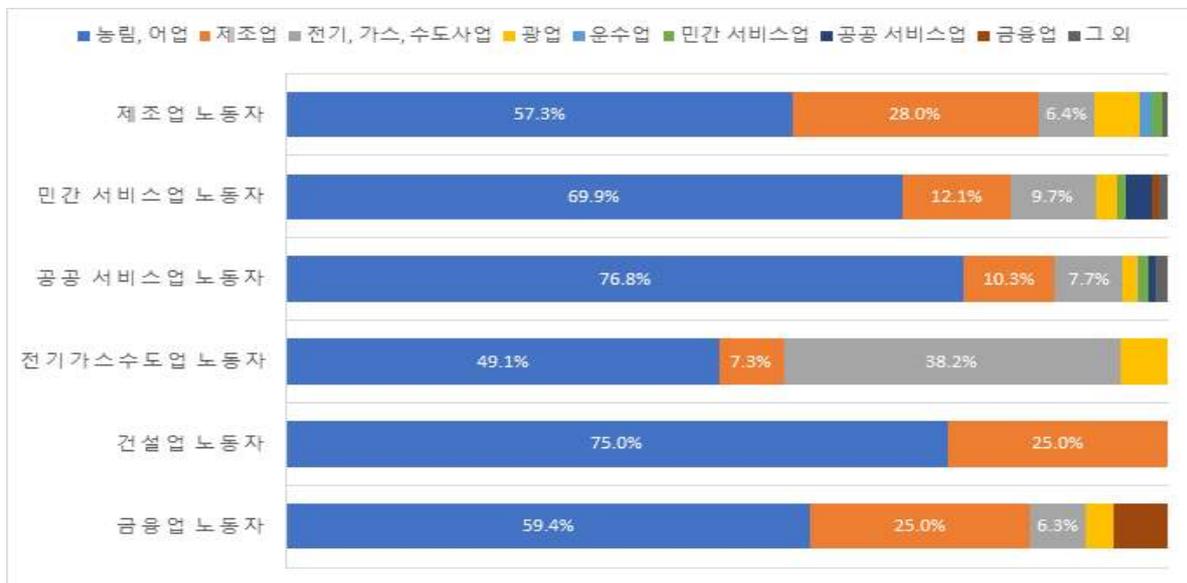
[그림 2] 기후변화위기로 영향받는 제1·2순위 산업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한편,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기후위기로 영향받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중 제조업을 제1순위 영향 산업으로 꼽은 비중은 28.0%, 제2순위로 꼽은 비중은 36.3%로, 1·2순위 합계 64.3%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종사자의 경우, 응답자 중 본인이 종사하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1순위 영향 산업으로 꼽은 비중은 38.2%, 제2순위로는 23.6%로, 1·2순위 합계 61.8%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업⁴⁾, 민간서비스업⁵⁾, 운수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본인이 속한 산업을 제1·2순위 영향 산업으로 꼽은 비중은 각각 4.0%, 10.2%, 13.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기후위기 영향 제1순위 산업에 대한 부문별 노동자 인식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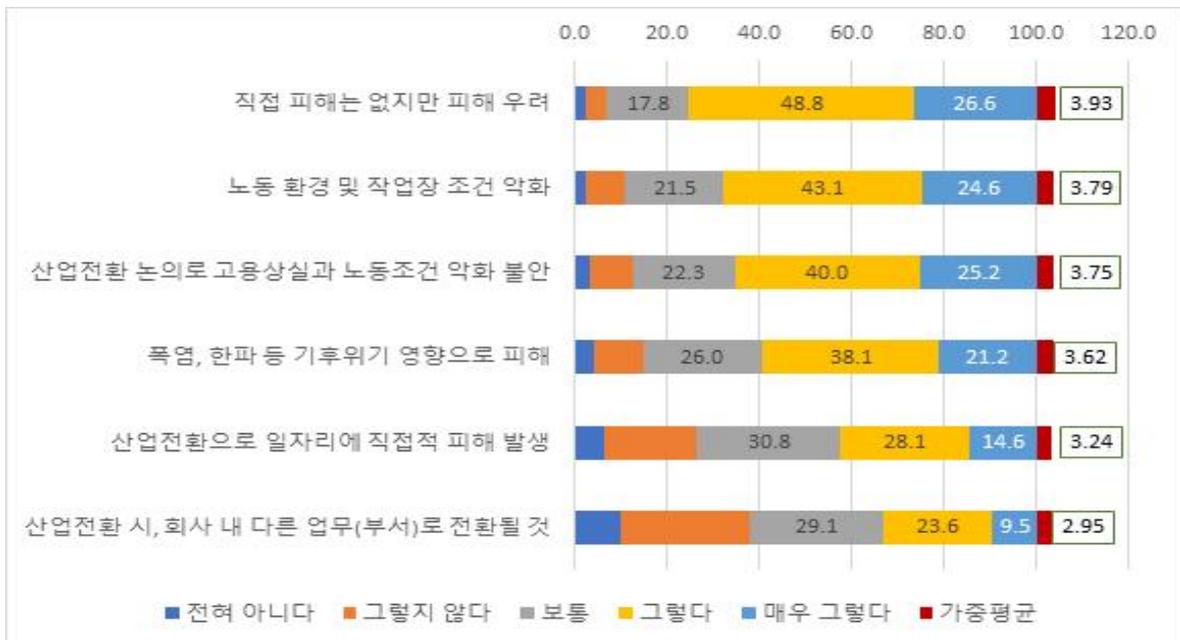
요약하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노동자 10명 중 대략 6명은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외 산업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속한 산업이 기후위기에 제1순위 또는 제2순위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10명 중 1명 내외로 매우 낮았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 체감도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5)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3) 구체적 체감도 ② : 일자리 영향에 대한 양면적 인식

기후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양면적이다. 첫째, ‘(현재) 직접 피해 없지만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후 위기를 ‘현재 위험’보다는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자 10명 중 6명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을 받았고, 10명 중 4명은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략 절반 내외의 노동자가 ‘현재 위험’으로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기후변화위기 일자리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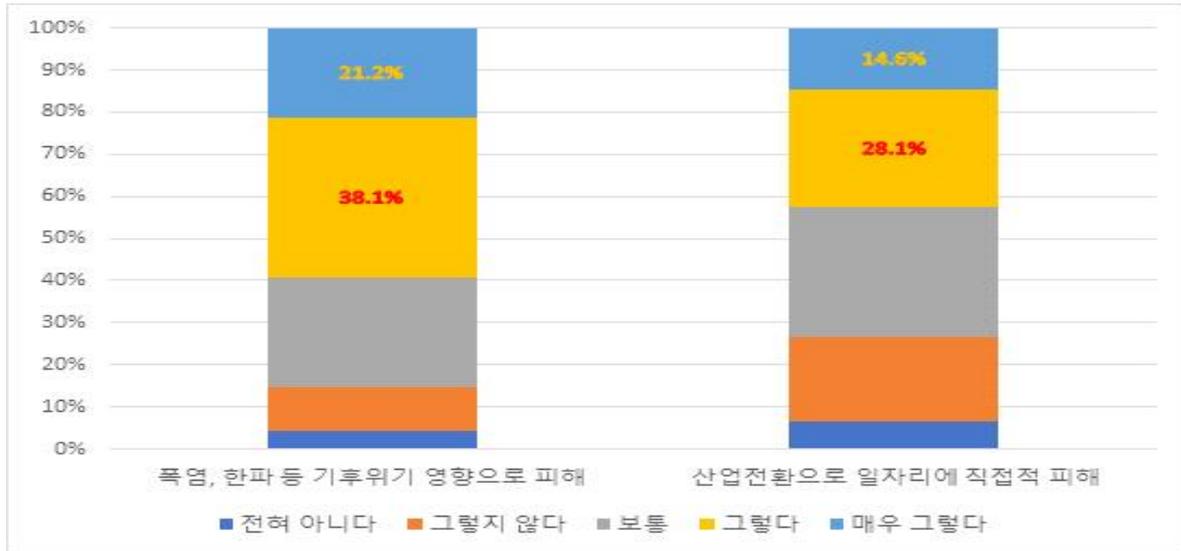


1) 가중 평균은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기후변화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질문19)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직접 피해는 없지만 피해 우려’에 대한 동의(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동환경 및 작업장 조건 악화될 것’(3.79), ‘산업전환 논의로 고용 상실과 노동조건 악화 불안감’(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위기가 향후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5] 기후위기로 인한 현재 직접 피해 노동자 비중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둘째, 기후위기로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중도 대략 절반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받은 피해’가 있다고 응답(그렇다 + 매우 그렇다)한 노동자는 거의 10명 중 6명(59.3%)에 달했다. 또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그렇다 + 매우 그렇다)도 42.6%에 달했다. 이는 기후변화위기가 노동 현장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구체적 체감도 ③ : 기후위기 피해 예측 집단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위기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에 대한 질문(질문15)에서 비정규직 노동자(4.4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청·협력업체(4.37), 독립법인(3.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협력업체와 독립법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하는 노동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6] 기후변화위기로 인해 피해 볼 집단에 대한 인식



1) 가중 평균은 전혀 피해 없음(1), 피해 없음(2), 보통(3), 피해 있음(4), 피해 매우 큼(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5) 소결

기후위기 심각성과 영향에 대한 노동자 체감도를 종합하면,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자녀들)에 더 큰 영향’, ‘(일자리에) 직접 피해 없지만 피해 우려’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제1·순위 산업으로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선택한 노동자 비중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체감은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후위기를 ‘현재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노동자 비중도 대략 절반 내외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는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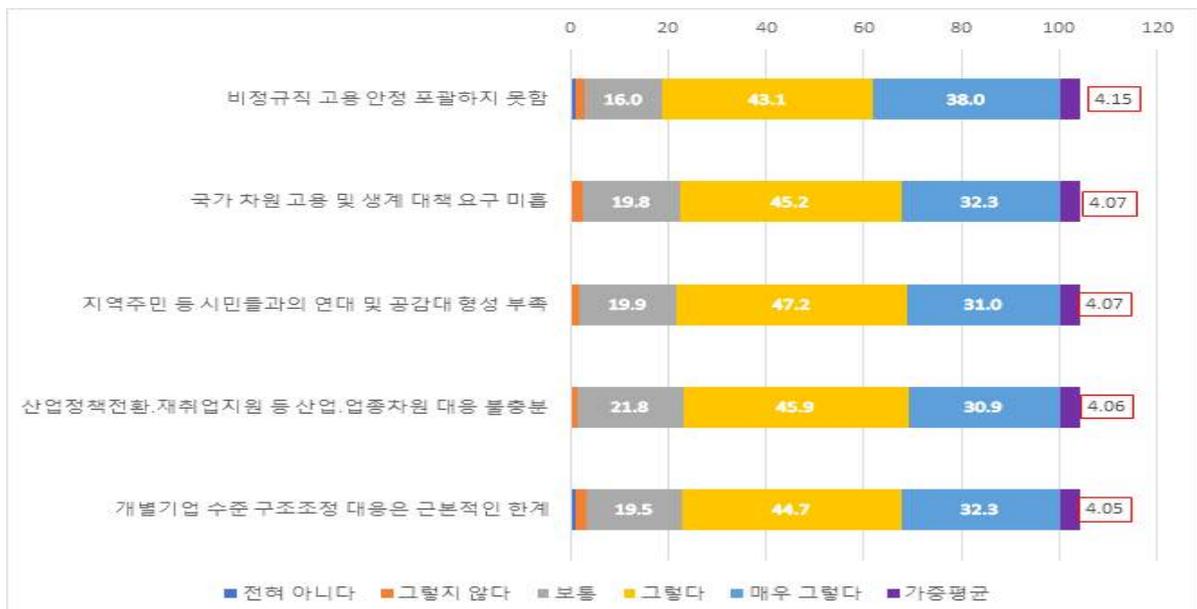
4.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평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 다배출 산업·업종 전환은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산업처럼 새롭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되는 부문도 발생한다. 이러한 산업·고용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체적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경영상 위기에 뿌리를 둔 구조조정 대응과 기후위기로 필연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대응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원인이 다르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또는 업무직무가 사라지거나 변경되고, 그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맥락 자체는 유사하다.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에 대한 평가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유념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드러낼 수 있다.

1) 전체적인 의견 분포

과거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에 대한 평가 항목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선택지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함’(4.15)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 평가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고용·생계 대책 요구 미흡’(4.07),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 부족’(4.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정책 전환, 재교육·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대응 불충분’(4.06)과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 근본적 한계’(4.05) 등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고용형태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에 있어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평가 항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체 응답 평균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동의율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86.2%)이 정규직(79.2%)보다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비정규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	0.9%	0.5%	12.5%	42.4%	43.8%	4.28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	0.5%	0.9%	16.5%	47.8%	34.4%	4.15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	0.9%	1.3%	18.8%	48.2%	30.8%	4.07
산업정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	0.5%	0.9%	22.3%	44.6%	31.7%	4.06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	1.8%	2.2%	17.4%	46.9%	31.7%	4.04

1)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제2순위 평가 항목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은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 대책 요구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동의율은 82.2%였다. 정규직의 경우는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동의율은 77.6%로 나타났다.

<표 5> 정규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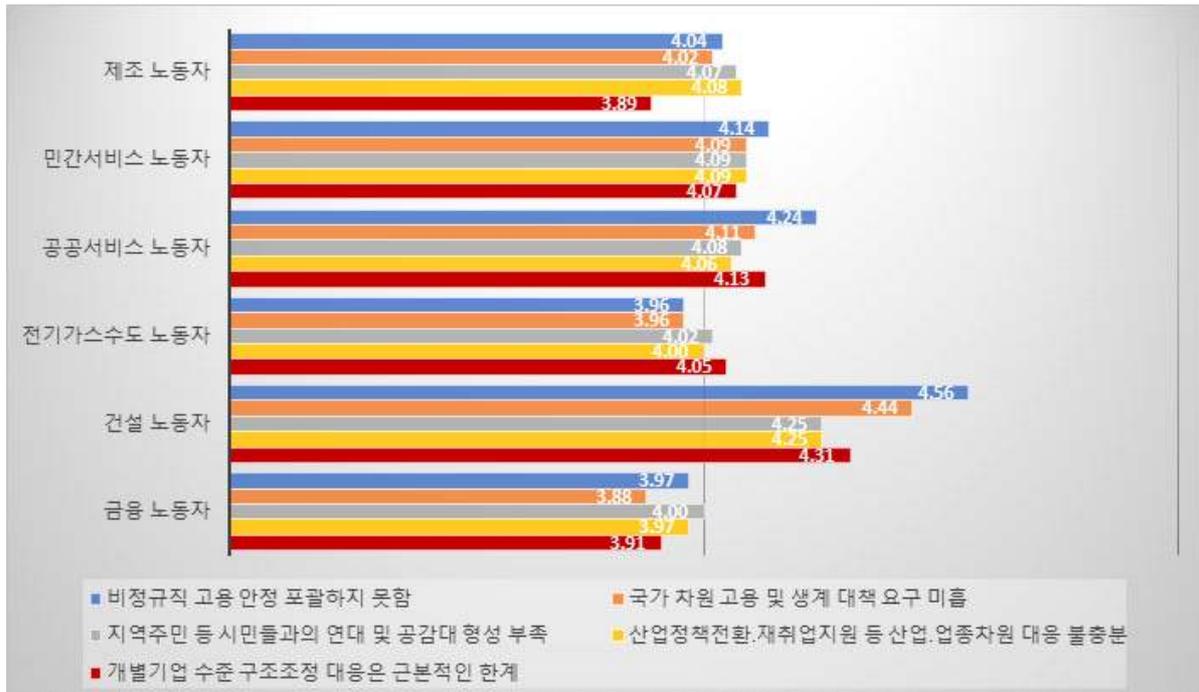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 평균 1)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	1.0%	2.6%	17.3%	43.1%	36.1%	4.11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	0.2%	1.8%	20.5%	46.8%	30.8%	4.06
산업정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	0.0%	1.4%	21.8%	46.2%	30.6%	4.06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	0.8%	2.2%	20.7%	43.9%	32.4%	4.05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	0.5%	2.7%	21.0%	43.8%	32.1%	4.04

1)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3) 부문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과거 구조조정 대응에 대한 평가를 제조, 서비스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림 8] 부문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의견 분포¹⁾



1) 점수는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먼저, 제조업 노동자들은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4.08),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 부족’(4.07) 등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서비스 노동자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함’(4.14)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항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도 ‘비정규직 고용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함’(4.24)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제2순위는 ‘개별 기업 수준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4.13)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가스수도 노동자는 ‘개별 기업 수준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4.05)를 첫 번째 평가로 선택했으며, 제2순위 평가로는 ‘지역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미흡’(4.02)로 나타났다. 건설 노동자는 제1·2순위 평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함’(4.56), ‘국가 차원의 고용·생계 대책 요구 미흡’(4.44)이 꼽혔다. 금융 노동자는 ‘지역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미흡’(4.00)을 제1순위 평가 항목으로 꼽았다.

부문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에서 두 가지 특징이 언급될 수 있다. 첫째, 전체 응답 결과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던 ‘비정규직 고용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함’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제1·2순위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다. 둘째, 전체 응답 결과에서 가장 동의 수준이 낮았던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라는 평가 항목이 공공서비스와 전기가스수도 노동자에게서는 제1 또는 2순위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과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연계되는 등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가를 상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의 특성이 반영된 응답으로 평가된다.

4) 사업체 규모별 구조조정 대응 평가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에 대한 평가를 민간부문 300인 이상, 민간부문 300인 이하, 공공부문 등 사업체 규모별로 나눠서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은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 정도는 공공부문 노동자 →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 →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5점 척도에 따른 가중평균이 3점대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300인 이하와 공공부문 노동자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4점대였다.

<표 6>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	1.0%	2.7%	20.3%	44.4%	31.5%	4.03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	0.7%	2.7%	22.0%	47.5%	27.1%	3.98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	1.4%	1.7%	24.8%	42.7%	29.5%	3.97
산업정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	0.3%	2.0%	25.1%	45.8%	26.8%	3.97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	1.0%	3.1%	23.1%	46.4%	26.4%	3.94

1)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둘째, 민간부문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공공부문 등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평가 항목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동의율(동의함+매우 동의함)은 차이가 있었다. 민간부문 300인 이상은 70% 중반대(75.9%)였지만, 민간부문 300인 미만(82.6%)과 공공부문(84.7%)은 80% 초중반대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300인 미만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보다 과거 구조조정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	0.8%	2.7%	14.0%	39.4%	43.2%	4.22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	0.0%	0.8%	20.1%	44.7%	34.5%	4.13
산업정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	0.0%	0.8%	19.3%	45.8%	34.1%	4.13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	0.4%	2.3%	19.3%	40.9%	37.1%	4.12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	0.8%	3.8%	17.1%	43.2%	35.2%	4.08

1)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셋째, 동의율이 두 번째로 높은 평가 항목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 간 차이가 있었다. 민간부문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을 꼽았고, 공공부문은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을 선택했다. 이는 민간부문 구조조정과 대응은 주로 기업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과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국가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공공부문 노동자 과거 구조조정 대응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함	1.2%	0.8%	13.3%	44.3%	40.4%	4.22
국가 차원 고용 및 생계대책 요구 미흡	0.0%	1.6%	16.9%	47.1%	34.5%	4.15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대 형성 부족	0.4%	1.2%	16.9%	49.0%	32.6%	4.12
산업정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차원 대응 불충분	0.0%	1.2%	19.2%	46.3%	33.3%	4.12
개별 기업 수준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	1.2%	1.6%	16.1%	47.8%	33.3%	4.11

1)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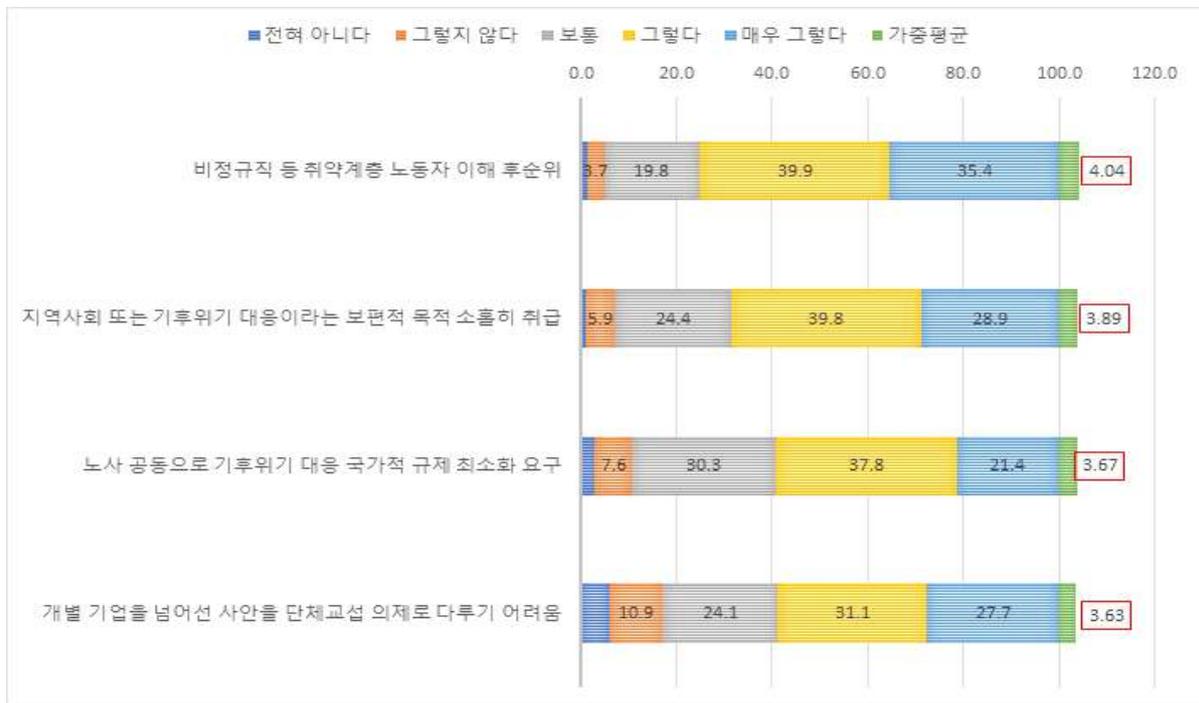
5.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

기업별 교섭체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불평등과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업적 임금·노동조건 표준화기 필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기업별 교섭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과거 구조조정 대응에 대한 평가도 기업별 교섭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 구조조정이 주로 기업별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의 대응도 기업 단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들은 기업별 교섭체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1) 전체적인 의견 분포

기업별 교섭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와 관련하여, 가장 동의가 높은 평가 항목은 ‘정규직 조합원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 이해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큼’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목적을 소홀히 취급할 가능성 큼’, ‘노사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가능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9]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 대한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고용형태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동의율은 정규직 72.1%, 비정규직 83.9%로 나타나, 양자 간 10% 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었다.

<표 9> 정규직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1.3%	4.7%	22.0%	39.7%	32.4%	3.97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	0.8%	6.4%	25.2%	39.9%	27.7%	3.87
기후일자리 등 개별기업을 넘어선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려움	6.1%	10.3%	24.0%	31.1%	28.5%	3.66
노사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2.9%	7.7%	31.9%	36.7%	20.8%	3.65

1)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둘째,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두 번째로 동의 수준이 높은 항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했다.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등 보편적 목적이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대해, 정규직은 67.6%, 비정규직은 70.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0.9%	0.9%	14.3%	39.7%	44.2%	4.25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	1.3%	4.9%	23.7%	38.4%	31.7%	3.94
노사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3.1%	6.7%	26.8%	40.2%	23.2%	3.74
기후일자리 등 개별기업을 넘어선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려움	6.7%	11.6%	25.9%	31.3%	24.6%	3.55

1)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기업별 교섭체제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현행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사가 담합하여 국가적·초국가적 규제 최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이러한 평가에 대한 동의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57.5%, 비정규직은 63.4%로, 대체로 10명 중 6명 내외의 노동자들은 기업별 교섭체제의 노사담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문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를 부문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제조,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모든 부문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제1·2순위 평가 항목은 전체 응답 결과와 동일했다. 즉,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평가는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밀릴 가능성’이었고, 다음으로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지역사회 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할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5점 척도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으로 제1·2순위 평가 항목별 동의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평가인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밀릴 가능성’에 대한 가중평균값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업에서는 3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0] 부문별 기업단위 교섭체제 평가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4) 사업체 규모별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하여,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별 교섭체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 항목은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었지만, 구체적인 동의율은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81.4%였지만, 공공부문은 75.7%, 300인 이상 사업체는 68.8%로 나타났다. 둘째, 동의율에 따른 평가 항목 순위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기업단위 교섭체제 평가 의견 분포¹⁾



1) 각 항목별 점수는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과거 구조조정 대응과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평가 설문에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취약계층 이해를 후순위로 다루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과거 대응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1〉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1.7%	4.8%	24.8%	38.3%	30.5%	3.91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	1.0%	5.8%	27.5%	37.3%	28.5%	3.86
노사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3.1%	10.2%	31.9%	37.0%	18.0%	3.57
기후일자리 등 개별기업을 넘어선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려움	7.1%	10.5%	27.8%	28.1%	26.4%	3.56

1)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12〉 민간부문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1.5%	1.5%	15.5%	42.4%	39.0%	4.16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	1.1%	4.2%	22.7%	42.1%	29.9%	3.95
노사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3.0%	6.1%	27.7%	40.2%	23.1%	3.74
기후일자리 등 개별기업을 넘어선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려움	6.4%	8.3%	21.2%	36.4%	27.7%	3.70

1)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13〉 공공부문 노동자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중평균 ¹⁾
정규직 조합원 이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후순위	0.8%	5.1%	18.4%	38.8%	36.9%	4.06
조합원 이해 우선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편적 목적 소홀히 취급	1.2%	8.2%	23.1%	39.6%	27.8%	3.85
노사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규제 최소화 요구	3.1%	6.3%	30.6%	36.1%	23.9%	3.71
기후일자리 등 개별기업을 넘어선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려움	5.5%	13.7%	22.4%	29.4%	29.0%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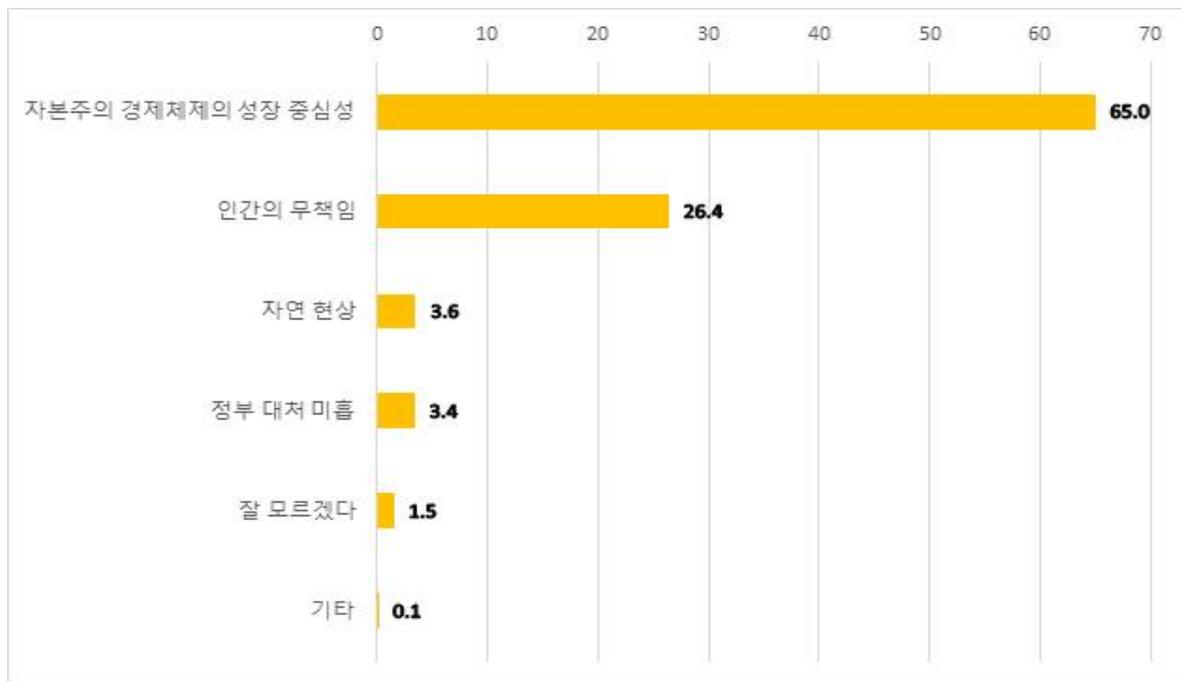
1)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6.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원칙·정책

1) 기후위기 원인

기후변화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약 2/3가량의 압도적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간의 무책임(26.4%)으로 나타났다. 자연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노동자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그림 12] 기후변화위기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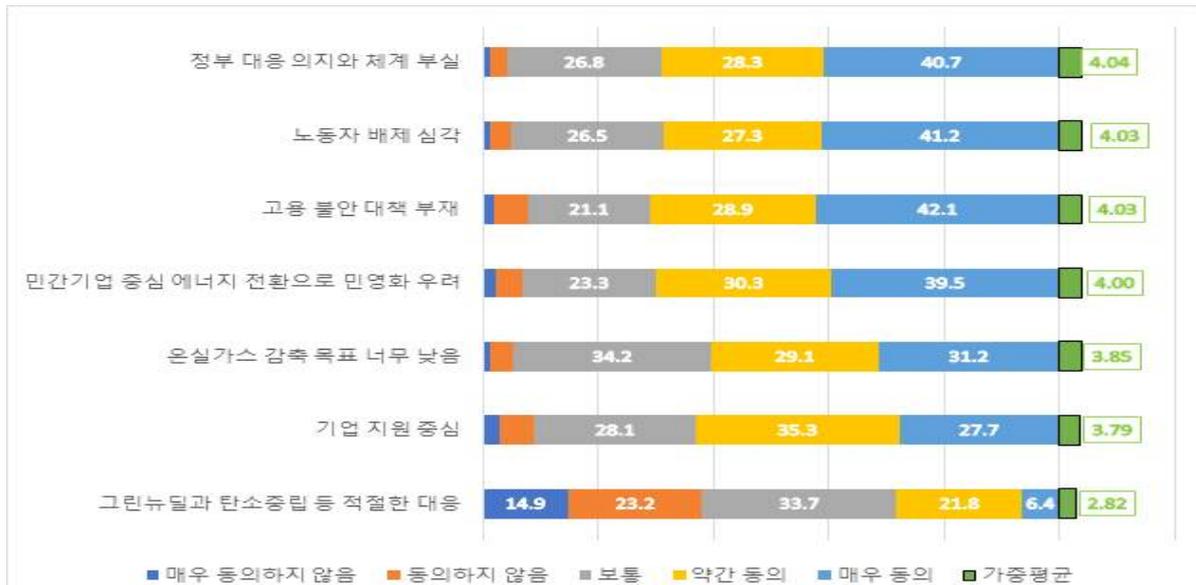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문재인 정부 기후대응 평가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항목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 대응 의지와 체계가 부실하고 빈약하다’(4.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 배제 심각’(4.03),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 대책이 없음’(4.03), ‘대기업 석탄발전소 건설 허용 등 민간기업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민영화 우려’(4.0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음’(3.85),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 지원 중

심'(3.79)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 미만(28.2%)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매우 동의 하지 않음(1), 동의하지 않음(2), 보통(3), 약간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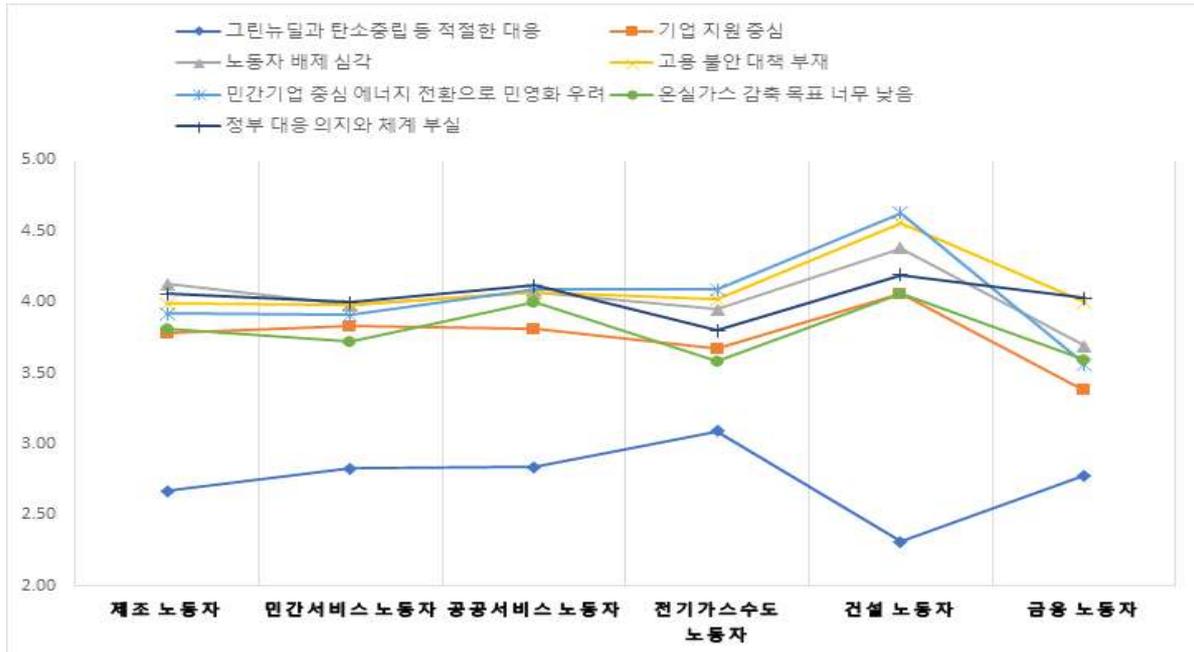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제조,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부문별로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각 부문별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평가 항목은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은 '노동자 배제 심각', 민간서비스·공공서비스·금융업은 '정부 대응 의지와 체계 부실',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은 '민간기업 중심 에너지 전환으로 민영화 우려'가 꼽혔다.

둘째,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의 경우, 건설 노동자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 → 금융 → 민간서비스 → 공공서비스 → 전기·가스·수도 노동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부문별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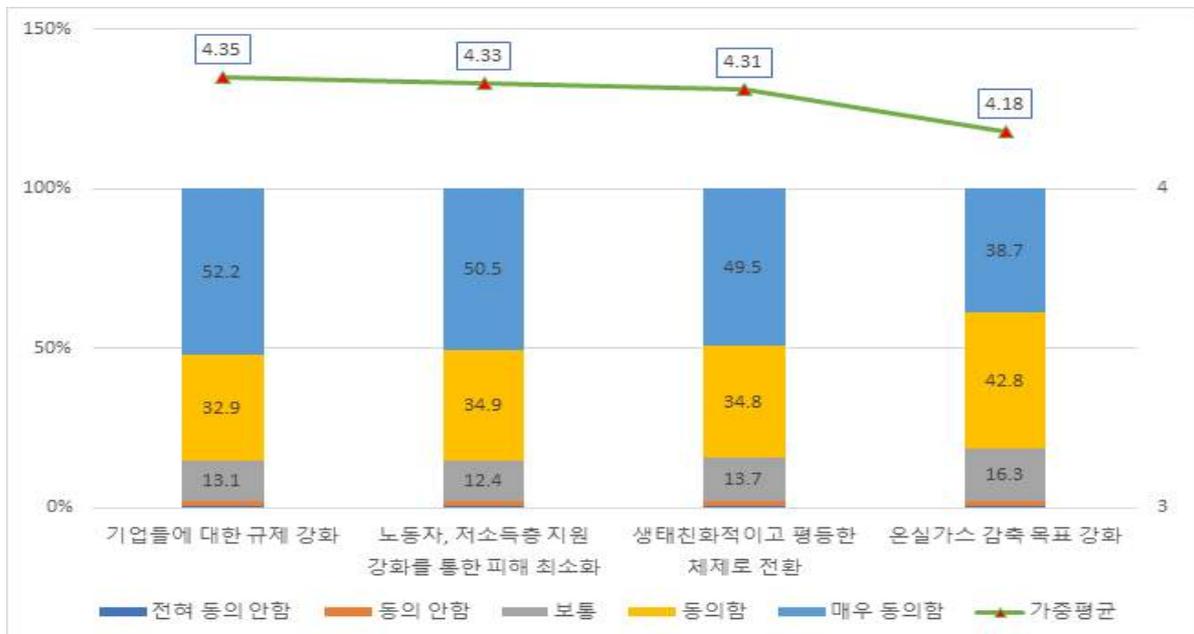
1) 가중 평균은 매우 동의 하지 않음(1), 동의하지 않음(2), 보통(3), 약간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3) 기후위기 대응 원칙

기후위기 대응 원칙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4.35)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4.33), ‘생태친화적이고 평등한 체제로 전환’(4.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규범과 한국의 책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4.31)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5] 기후위기 대응 원칙에 대한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에 대한 가중 평균값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세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민간부문 300인 이상, 민간부문 300인 미만, 공공부문 등 사업장 규모별로 기후위기 대응 원칙에 관한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의 항목별 동의 수준이 300인 미만 및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는 기후위기 대응 원칙으로 제시된 4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둘째, 민간부문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 노동자는 제1순위 원칙으로 ‘기업규제 강화’를 꼽은 반면,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는 ‘노동자,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300인 미만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및 고용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공공부문 노동자는 제2순위 원칙으로 ‘생태친화적이고 평등한 체제로 전환’을 꼽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체제 전환’에 대한 동의 수준이 민간부문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사업장 규모별 기후위기 대응 원칙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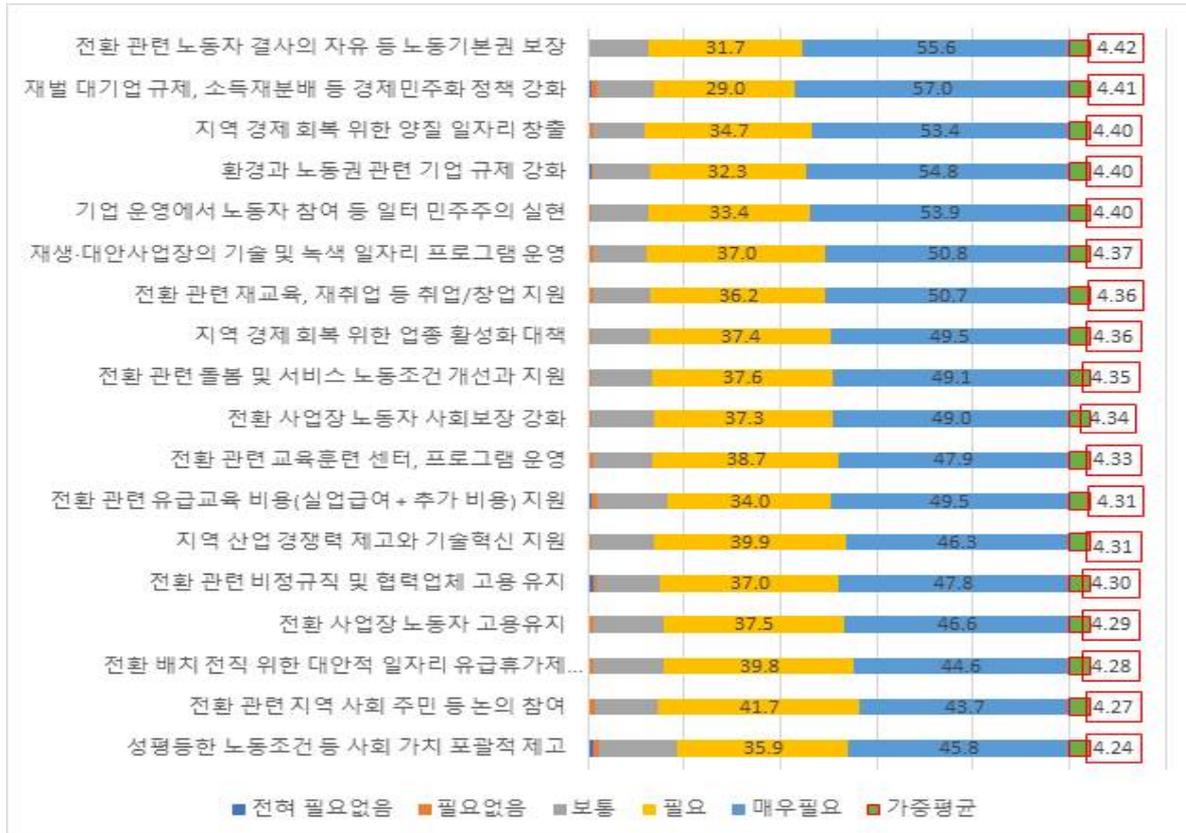


1) 각 항목별 점수는 전혀 동의 안함(1), 동의 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등 5점 척도에 따른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중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지역 경제회복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 규제 강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환 관련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조직 노동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기후위기 대응 영역별 정책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필요없음(1), 필요없음(2), 보통(3), 필요함(4), 매우 필요함(5) 등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사업장 규모별로 기후위기 대응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의견 분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각 영역별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공공부문 노동자 →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 →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자 동의가 높은 제1·2순위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경우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 규제 강화’,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민간부문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해 민간부문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사업장 규모별 기후위기 대응 영역별 정책 의견 분포



1) 가중 평균은 전혀 필요없음(1), 필요없음(2), 보통(3), 필요함(4), 매우 필요함(5) 등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된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 인식은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역별 정책 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이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규직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규제 및 경제민주화 정책,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규제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른 영역별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대응과 기업규제 대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존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보장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대체로 비정규직 조합원은 대응 원칙으로는 ‘(일자리 등) 피해 최소화’, 영역별 대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 인식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가중평균 ¹⁾
전환 관련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0.2%	0.2%	12.3%	31.1%	56.3%	4.43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0.5%	1.1%	12.5%	28.2%	57.7%	4.42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 규제 강화	0.3%	0.5%	12.8%	31.1%	55.3%	4.41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 참여 등 일터 민주주의 실현	0.0%	0.6%	12.8%	32.2%	54.3%	4.40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0.2%	0.6%	11.5%	34.9%	52.7%	4.39
재생·대안사업장의 기술 및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0.0%	1.0%	11.9%	36.5%	50.6%	4.37
전환 관련 재교육, 재취업 등 취업/창업 지원	0.2%	1.0%	12.3%	35.6%	51.0%	4.36
전환 관련 돌봄 및 서비스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	0.0%	0.5%	12.8%	38.1%	48.6%	4.35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	0.2%	0.3%	13.1%	38.3%	48.1%	4.34
전환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강화	0.2%	0.5%	14.3%	36.1%	49.0%	4.33
전환 관련 교육훈련 센터, 프로그램 운영	0.2%	1.0%	12.8%	38.3%	47.8%	4.33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 지원	0.2%	0.3%	13.3%	40.5%	45.7%	4.31
전환 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	0.3%	0.8%	15.9%	37.0%	46.0%	4.28
전환 관련 유급교육 비용(실업급여 + 추가 비용) 지원	0.5%	1.4%	16.0%	33.3%	48.7%	4.28
전환 배치 전직 위한 대안적 일자리 유급휴가제 운영(기술, 숙련 형성)	0.2%	0.6%	15.1%	39.4%	44.7%	4.28
전환 관련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고용 유지	1.0%	1.0%	14.3%	37.3%	46.5%	4.27
전환 관련 지역 사회 주민 등 논의 참여	0.2%	1.4%	13.0%	41.8%	43.6%	4.27
성평등한 노동조건 등 사회 가치 포괄적 제고	0.8%	1.4%	16.7%	35.3%	45.8%	4.24

1) 전혀 필요없음(1), 필요없음(2), 보통(3), 필요(4), 매우 필요(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15〉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식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가중평균 ¹⁾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0.9%	0.9%	8.9%	33.0%	56.3%	4.43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	0.5%	0.5%	10.7%	33.9%	54.5%	4.42
전환 관련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0.5%	0.5%	11.6%	32.1%	55.4%	4.42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 참여 등 일터 민주주의 실현	0.9%	0.0%	9.8%	36.6%	52.7%	4.40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 규제 강화	1.3%	0.9%	8.5%	36.2%	53.1%	4.39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1.3%	0.9%	10.7%	31.7%	55.4%	4.39
전환 관련 재교육, 재취업 등 취업/창업 지원	0.5%	0.9%	10.7%	36.6%	51.3%	4.38
전환 관련 유급교육 비용(실업급여 + 추가 비용) 지원	0.9%	0.5%	11.2%	35.3%	52.2%	4.38
재생·대안사업장의 기술 및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1.3%	0.5%	8.5%	38.0%	51.8%	4.38
전환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강화	0.9%	0.0%	9.8%	40.2%	49.1%	4.37
전환 관련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고용 유지	0.9%	0.9%	10.3%	36.6%	51.3%	4.37
전환 관련 돌봄 및 서비스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	0.9%	0.0%	11.6%	36.6%	50.9%	4.37
전환 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	0.5%	0.0%	12.1%	38.4%	49.1%	4.36
전환 관련 교육훈련 센터, 프로그램 운영	0.5%	0.9%	10.3%	39.3%	49.1%	4.36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 지원	0.9%	0.5%	12.5%	37.5%	48.7%	4.33
전환 배치 전직 위한 대안적 일자리 유급휴가제 운영(기술, 숙련 형성)	0.9%	0.5%	13.4%	39.3%	46.0%	4.29
전환 관련 지역 사회 주민 등 논의 참여	0.9%	0.5%	13.4%	40.2%	45.1%	4.28
성평등한 노동조건 등 사회 가치 포괄적 제고	1.3%	1.3%	14.3%	37.5%	45.5%	4.25

1) 전혀 필요없음(1), 필요없음(2), 보통(3), 필요(4), 매우 필요(5) 등 1~5까지 5점 척도에 따른 동의 정도의 가중 평균값

자료: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설문결과분석 바탕으로 필자 작성

5) 일자리 대책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개편 과정에서 고용의 질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1순위 해결책으로 ‘기후 일자리 확대 등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의 질 저하 없이 일자리 보장’(42.5%)과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등 획기적인 제도 및 관행 개선’(35.5%)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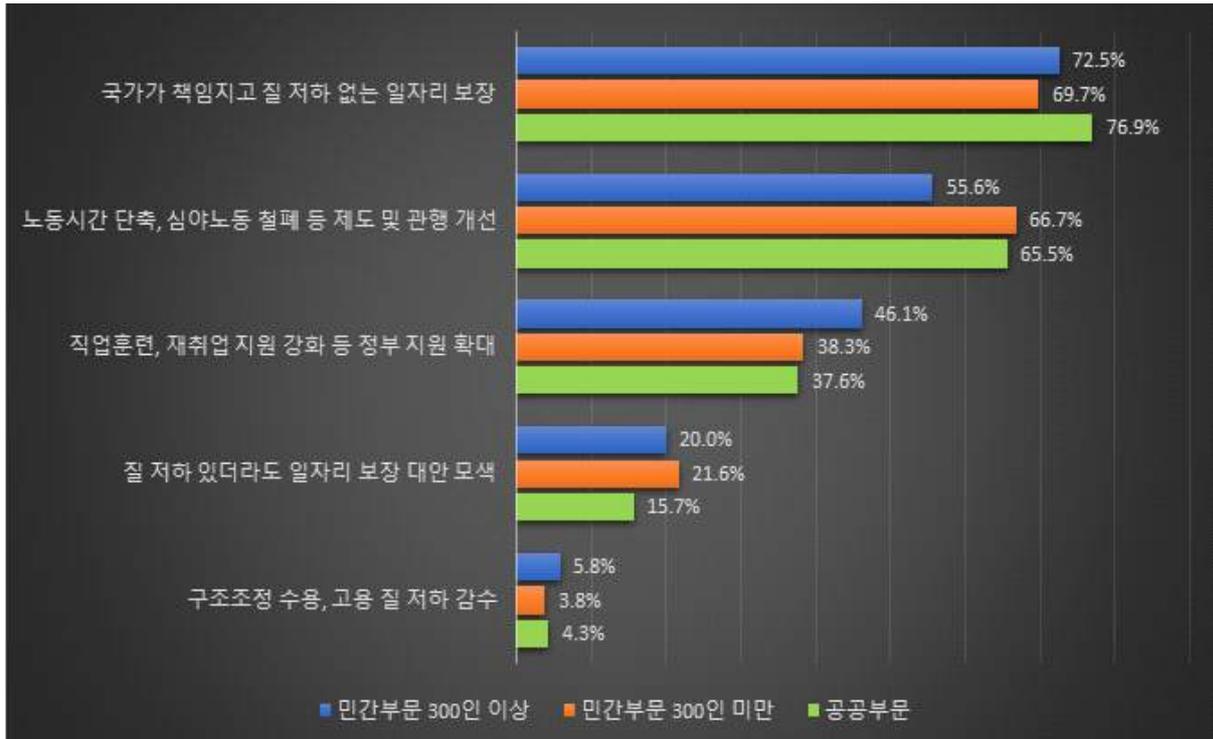
[그림 19]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개편과정에서 제1·2순위 일자리 대책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설문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제2순위 해결책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의 질 저하 없는 일자리 보장’(31.4%),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정부 지원 확대’(27.9%)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제1·2순위 응답을 합한 비중은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의 질 저하 없는 일자리 보장(73.9%) →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등 획기적인 제도 및 관행 개선(62.0%) →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정부 지원 확대(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 문제 해결책(1+2순위) 의견 분포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설문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민간부문 300인 이상, 민간부문 300인 미만, 공공부문 등으로 나눠서 제1·2순위 일자리 해결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가 책임지고 질 저하 없는 일자리 보장’은 모든 부문에서 유력한 일자리 해결책으로 꼽혔는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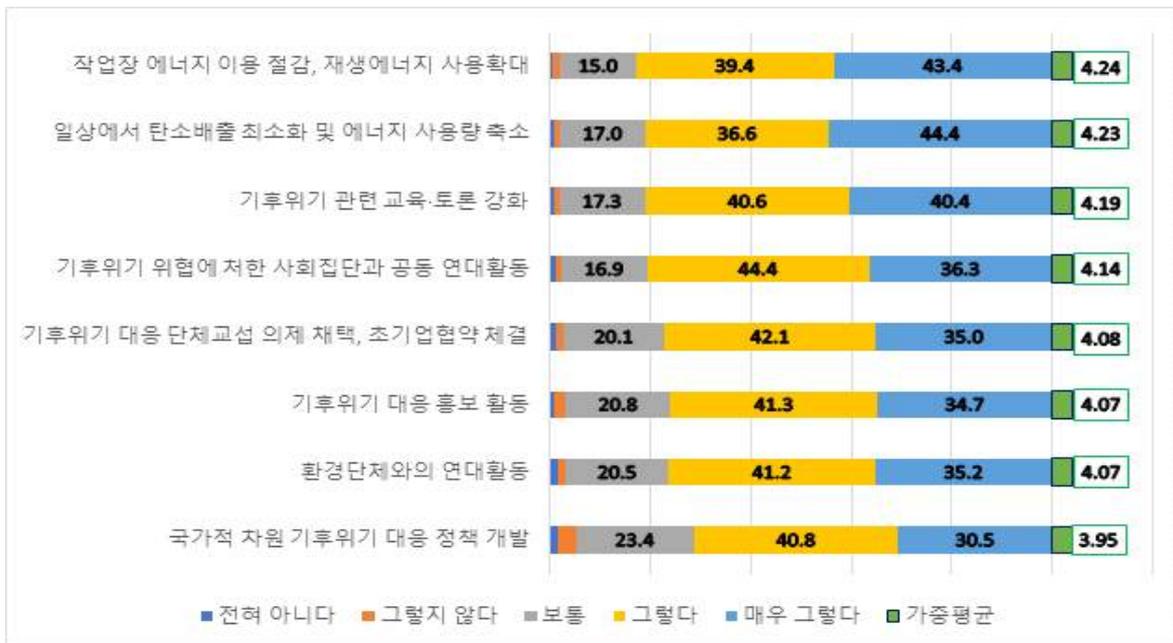
둘째,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등 획기적인 제도 및 관행 개선은 민간부문 300인 미만 노동자들 사이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신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정부 지원 확대는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하여,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지부)이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4.24)와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사용량 축소’(4.23)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기후위기 대응 홍보활동/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4.07), ‘국가적 차원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발’(3.95) 등이었다. 한편, ‘기후위기 관련 교육·토론 강화’(4.19), ‘지역사회,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로 위협에 처한 다른 사회집단과 공동 연대활동’(4.14), ‘기후위기 대응 단체교섭 의제 채택 및 초기협약 체결’(4.08)은 중간 동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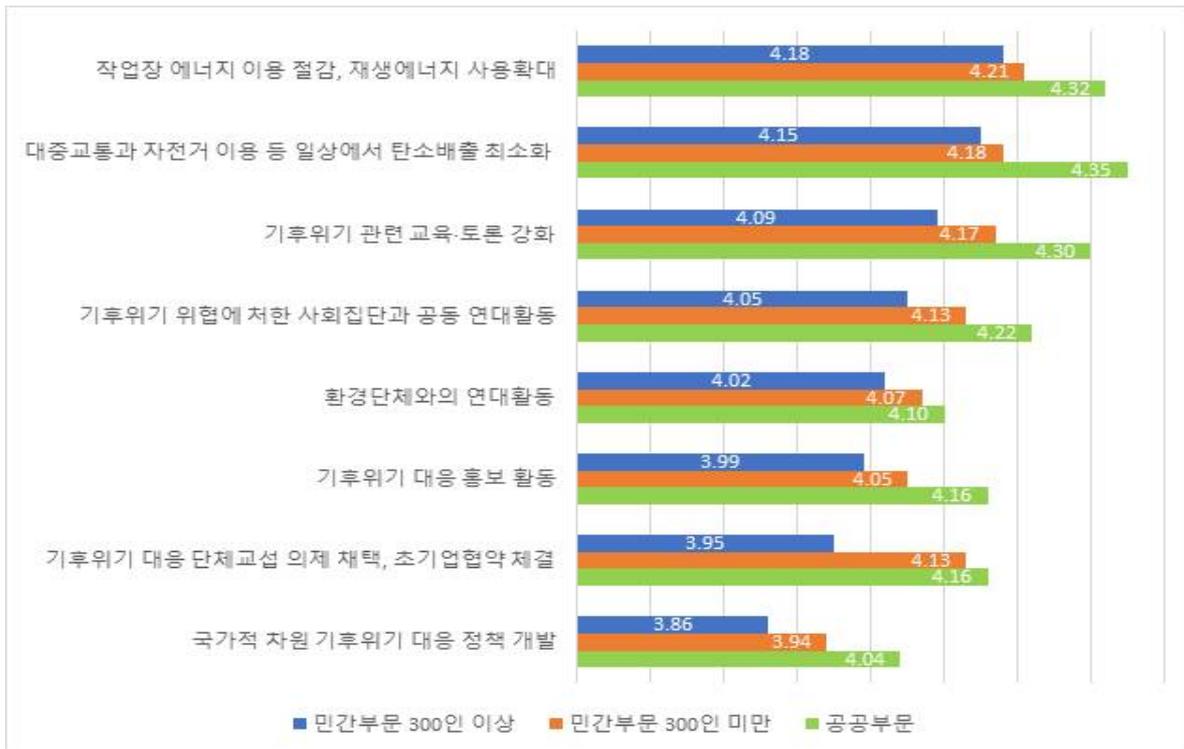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설문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러한 설문결과는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집단적 또는 국가적 대응’보다는 ‘개인적 또는 작업장 수준 대응’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을 꼽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사이에 일정한 인식상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자가 ‘녹색 소비자’로서 일상적·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대안적 실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간부문 300인 이상, 민간부문 300인 미만, 공공부문 등으로 나눠서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부문 노동자는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이용 절감’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발을 촉구하는 활동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고 초기협약을 채택하는 활동에 대한 동의 정도는 민간부문 300인 이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고, 민간부문 300인 미만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중간 동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주력 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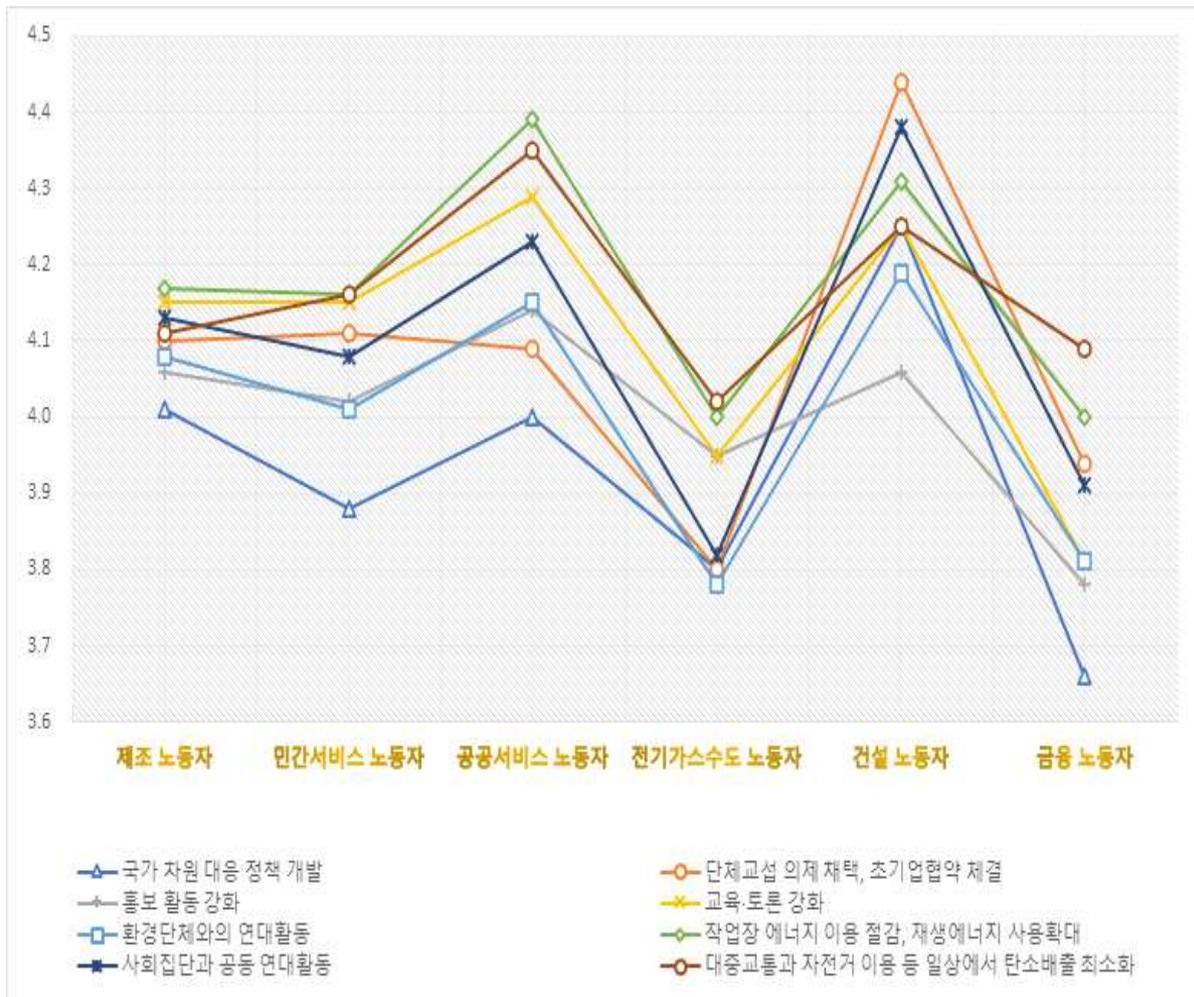


1) 각 항목별 점수는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설문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를 부문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건설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 노동자와 비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단체교섭 의제로 채택하고 초기협약을 체결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가 제1순위이면서, 가중 평균 점

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부문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둘째, 노동조합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기·가스·수도 및 금융 노동자의 동의 수준이 낮았고, 건설 및 공공서비스 노동자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 부문별 노동조합 주력정책 인식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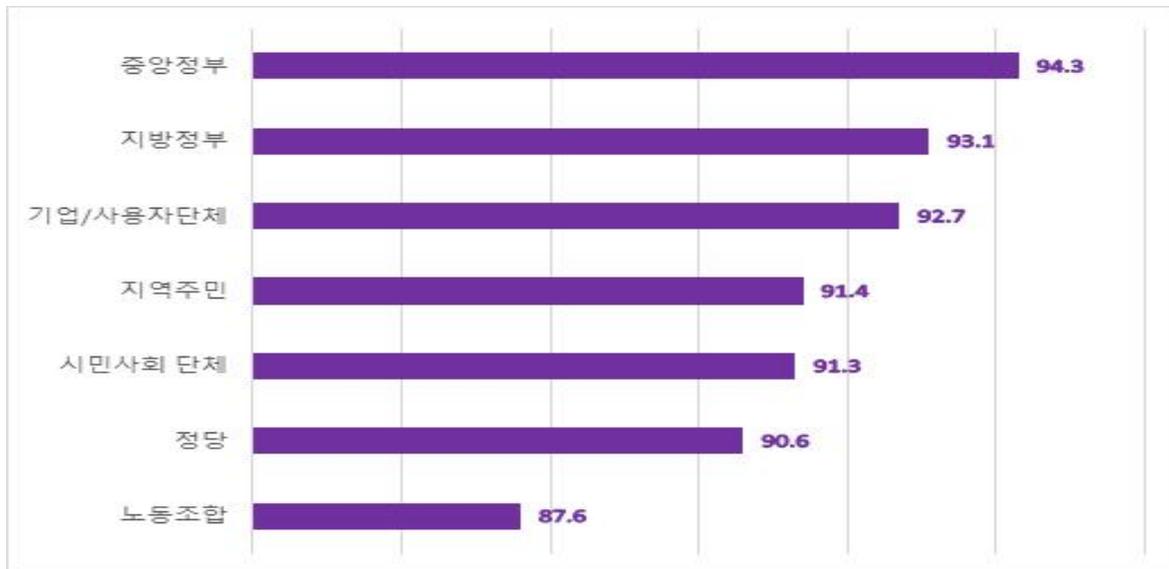


1) 각 항목별 점수는 전혀 아니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점 척도에 따른 가중 평균값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설문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7. 기후위기 대응 주체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노동조합은 어떤 정책에 주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4] 기후위기 대응 주체의 중요성 인식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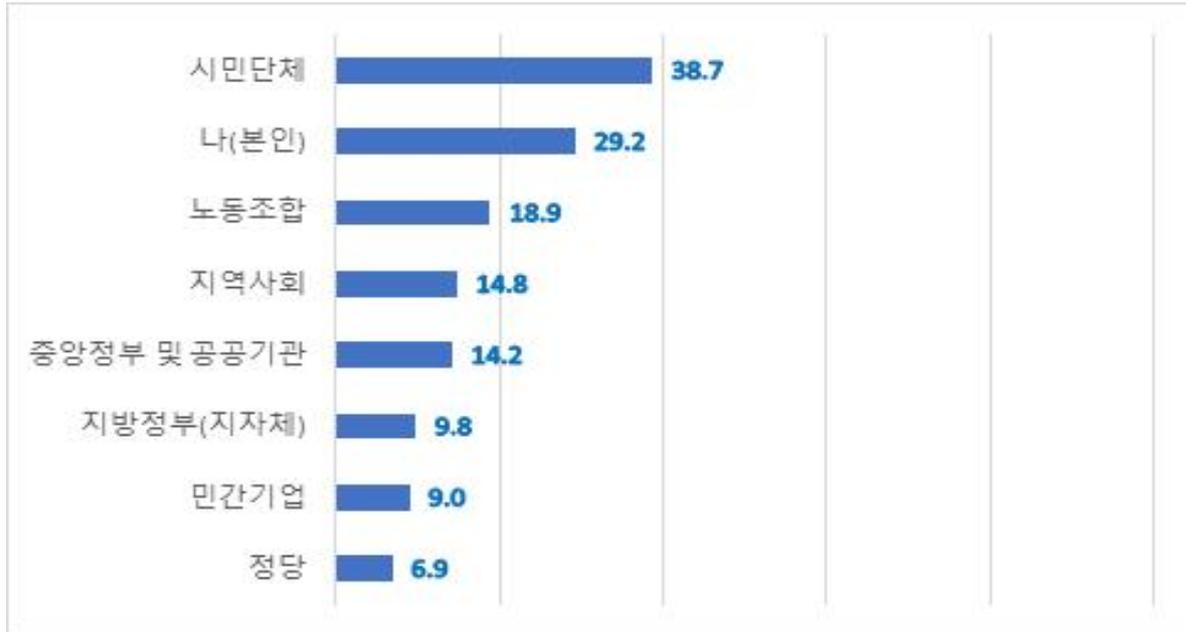


주: '매우 필요'와 '필요' 등의 비율 합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및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조사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먼저, 기후변화·위기 대응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각 집단(주체)들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중앙정부(94.3%)와 지방정부(93.1%)가 다른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 다음으로는 기업·사용자단체(92.7%), 지역주민(91.4%), 시민사회단체(91.3%), 정당(90.6%), 노동조합(87.6%)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기업 및 사용자단체의 중요성이 중앙 및 지방정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노동조합 중요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본인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당면 과제, 또는 본인과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노동조합보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노동조합 밖 외부 주체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5] 주체별 기후위기 대응 적절성에 대한 인식



주: '매우 필요'와 '필요' 동의 비율 합계(%)

자료: 민주노동연구원 및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 조사결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한편 주체별로 현재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동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동의 비율이 높은 주체로 시민단체가 꼽혔지만,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다음으로는 나(본인)(29.2%) → 노동조합(18.9%) → 지역사회(14.8%)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14.2%) → 지방정부(지자체)(9.8%) → 민간기업(9.0%) → 정당(6.9%)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노동자들은 현재 기후 위기 대응이 주체와 상관없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인의 개인적 대응을 노동조합, 지역사회, 정부, 기업,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얼마나 다른 주체들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8. 요약 및 시사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노동’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 ~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서베이몽키(surevymonkey)를 이용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029명이었으며, 이 중 845명이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추상적·직관적 체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직장 및 일상 삶의 문제로 연관 지어 인식하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자녀들)에 더 큰 영향’, ‘(일자리에) 직접 피해 없지만 피해 우려’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제1·순위 산업으로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선택한 노동자 비중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체감은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후위기를 ‘현재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노동자 비중도 대략 절반 내외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면에서는 ‘(현재) 직접 피해 없지만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후위기를 ‘현재 위협’보다는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폭연·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받았고, 10명 중 4명은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략 절반 내외의 노동자가 ‘현재 위협’으로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위기가 이미 노동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은 노동자 비중이 65%로 인간의 무책임, 자연현상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고, ‘체제 전환’을 해결책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체계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선택이라기보다 ‘규범적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향후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및 고용전환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에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배적인 교섭체제인 기업별 교섭체제의 초기업 교섭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기후정책에 대해 ‘정부 대응 의지 및 체제가 부실하고 빈약’하며, ‘노동자 배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거의 10명 중 3명(28.2%)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적 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된다.

여섯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조사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 노동자로서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주체별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양면적 입장을 드러내

고 있다. 집단적 대응의 전제로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노동조합 중요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조합 밖 주체’들의 역할을 ‘노동조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양가적 입장은 결국 노동조합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일곱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역별 정책 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이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규제 및 경제민주화 정책,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규제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른 영역별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대응과 기업규제 대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차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존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보장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하여,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적이다. 작업장은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면서, 노동조합 영향력이 일정하게나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전략 마련 과정에서 작업장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수준의 실천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초기업교섭을 성사시켜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다루도록 노력하되, 기업별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이라도 공통의 요구를 포함하는 식으로 작업장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붙임자료>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노동의 대응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조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

2021년 9월 1일(수) ~ 9월 29일(수)

파트1	응답자 특성
-----	--------

문 1-1 귀하의 소속 가맹조직(산별·연맹)은 어디입니까? ()

문 1-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W) ② 남성(M) ③ 그 외의 성

문 1-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문 1-4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정규직
- ② 무기계약직
- ③ 기간제
- ④ 시간제
- ⑤ 파견/용역/하청
- ⑥ 특수고용
- ⑦ 일용
- ⑧ 기타

문 1-5 귀하의 현재의 직장(혹은 일터)에서 일을 한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차

문 1-6 귀하의 현재 직업의 주된 일자리 기준, 총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차

문 1-7 귀하가 현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산업·업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⑩ 정보통신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㉑ 국제 및 외국기관

문 1-8 귀하가 현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직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예시~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업예시~
- ⑨ 단순노무 종사자

문 1-9 귀하가 속한 직장이나 주된 일을 하는 곳은 아래에 어느 곳에 해당 됩니까?

- ①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업장 규모 무관)
- ②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
- ③ 민간부문 30~300인 미만 사업장
- ④ 민간부문 5~30인 미만 사업장
- ⑤ 민간부문 5인 미만 사업장
- ⑥ 기타()

문 1-10 귀하가 속한 직장이나 주된 일을 하는 곳은 아래 중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 ① 원청
- ② 하청(자회사, 민간위탁 등)
- ③ 원하청 관계 없는 독립법인

문 1-11 귀하의 최근 3개월간 주된 일을 하는 곳에서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보수/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세금 공제 전) 만원

파트2	기후환경 변화, 위기에 대한 일반 인식
------------	------------------------------

문 2-1 최근 UN 등 국제기구는 기후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기후변화 위기는 현재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2기후변화 위기는 실업문제 등 일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경제에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기후변화 위기는 개인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기후변화 위기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기후변화 위기는 미래세대(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7기후변화 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8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이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9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긴급히 전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기후변화 위기는 한국 사회 체제와 지역사회가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기후변화 위기는 전기요금 인상, 생산시설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다음의 주체들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①	②	③	④	⑤
2지방정부(지자체)	①	②	③	④	⑤
3민간기업	①	②	③	④	⑤
4정당	①	②	③	④	⑤
4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5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6지역사회	①	②	③	④	⑤
7나(본인)	①	②	③	④	⑤

문 2-3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각 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지자체)	①	②	③	④	⑤
3) 기업 및 사용자단체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정당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주민	①	②	③	④	⑤

문 2-4 기후변화와 위기로 인해 다음의 각 집단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피해 없음<-----> 피해 매우 큼				
종사상 지위별	1) 정규직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2) 비정규직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기업 원하청	3) 대기업 원청	①	②	③	④	⑤
	4) 하청·협력업체	①	②	③	④	⑤
	5) 워하청 관계없는 독립 법인	①	②	③	④	⑤

문 2-5 기후변화와 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은 어느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 (2순위: ___)

- ① 농림,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수도사업 ⑤ 운수업
- ⑥ 민간 서비스업 ⑦ 공공 서비스업 ⑧ 금융업 ⑨ 그 외: (_____)

문 2-6 기후변화와 위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 현상 ② 인간의 무책임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
- ④ 정부 대처 미흡 ⑤ 잘 모르겠다 ⑥ 그 외: (_____)

파트3 **일자리 영향**

문 3-1 당신의 일자리는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받는 피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산업전환 논의로 고용상실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산업전환이 되어도 회사 내 다른 업무(부서)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노동 환경 및 작업장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귀하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산업개편 과정에서 고용의 질과 일자리 문제 일자리 고용문제는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고용의 질 저하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② 일정한 고용의 질 저하가 있더라도 일자리 보장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③ 기후일자리 확대 등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의 질 저하 없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④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⑤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 등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파트4 **정부대응 평가와 노동조합 역할**

문 4-1 귀하는 문재인 정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매우 동의
1)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기업 지원 중심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 배제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 대책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대기업 석탄발전소 건설 허용 등 민간기업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민영화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 대응 의지와 체계가 부실하고 빈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현행 한국의 지배적인 단체교섭 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인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 렇 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업별교섭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 사안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의제를 다룰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별 교섭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규제의 최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업별 교섭은 조합원의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목적이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별 교섭은 정규직 조합원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그동안 국가 경제, 업종 또는 개별 기업 수준의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노동조합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구조조정 대응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아래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 렇 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개별기업 수준에서 구조조정 대응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비정규직 고용 안정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국가 차원의 고용 및 생계 대책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주민 등 시민들과의 연대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업전환 전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 산업·업종 자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4 귀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과 원칙으로 아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국제사회 규범과 한국의 책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①	②	③	④	⑤
4) 기후위기와 불평등 만들어낸 정치경제 체제를 생태친화적이고 평등한 체제로 전환	①	②	③	④	⑤

문 4-5 귀하는 아래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 각 영역별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전환 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	①	②	③	④	⑤
2) 전환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장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전환 관련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고용 유지	①	②	③	④	⑤
4) 전환 관련 재교육,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전환 관련 교육훈련 센터,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전환 관련 유급교육 비용(실업급여 + 추가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업종 활성화 대책	①	②	③	④	⑤
9)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재생·대안사업장의 기술 및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저화 배치 전직 위한 대안적 일자리 유급휴가제 운영(기술, 숙련 형성)	①	②	③	④	⑤
12) 전환 관련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13) 전환 관련 지역 사회 주민 등 논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14) 성평등한 노동조건 등 사회 가치 포괄적 제고	①	②	③	④	⑤
15) 전환 관련 돌봄 및 서비스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	①	②	③	④	⑤
16) 환경과 노동권 관련 기업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17) 재벌 대기업 규제,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18)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 참여 등 일터 민주주의 실현	①	②	③	④	⑤

문 4-6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지부)이 주력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발	①	②	③	④	⑤
2) 기후위기 대응 단체교섭 의제 채택 및 산업·업종·지역 등 초기 업협약 체결	①	②	③	④	⑤
3) 기후위기 대응 홍보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기후위기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토론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혹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적극노력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로 위협에 처한 다른 사회집단과 공동 연대활동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지역 먹거리 이용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사용량 축소 노력	①	②	③	④	⑤

문 4-7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일자리·노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기후위기/탄소중립 :

• 산업전환/일자리/노동 :